

한은, 기준금리 전원일치 동결

“성장세 회복 지원하며 물가·금융안정 등 면밀 점검할 것”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금통위원 5명 “3개월 뒤에도 유지”
반도체 경기·환율 상방 리스크 있어
원·달러 환율, 수도권 주택 오름세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 보고 판단

“소수 의견은 없었다.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
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통화
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
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
50%로 유지한 가운데,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겹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경로는 ‘금융안정 점
검’이 전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 동결 ‘전원일치’…3개월 전망 동결
5대 1

이번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였다.
3개월 뒤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동결 우위’로 기울었다.

이창용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공동취재단

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
다’는 견해를, 나머지 1명은 ‘현재 2.
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인하·동결 전
망이 3대 3으로 갈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동결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시장의 인하 속도 기대를 다시 한번 높
려둔 셈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
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
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
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
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개선 흐
름이다.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
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봤다.

◆ 환율·부동산 ‘금융안정’에 무게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가
장 오래 붙든 키워드는 ‘금융안정’이었
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큰 폭 하락했
다가 달러화 강세·엔화 약세·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에 따른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고 밝
혔다.

물가 지표는 당장 ‘인하 신호’로 읽
히기 어렵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한은은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소폭 낮아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
너지 제외)는 2.0%로 전월 수준을 유지
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6%
로 전월과 같다고 밝혔다. 물가가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높아

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금리로 직접 겨
냥’하는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환율레
벨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환율이 물
가·기대·분배에 미치는 파급을 보고 정
책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정책은 환율
을 보고 하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에 주
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5bp(1bp=0.01%포인트)로
는 안 되고 200bp, 300bp를 올려야 하
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도 ‘완화 속도’에 제약을 주
는 변수로 꼽혔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은 지난해 3분기 1.8% 상승했고 10~11
월에도 1.2%~0.8%로 오름세가 이어졌
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
름세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
가되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
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K온, 실리콘 음극 전고체 배터리 성능저하 문제 개선

연세대 연구팀과 신소재 바인더 개발
전기차 적용 가정 조건서 구동 성공



cations)’에 지난해 12월 5일 게재됐다. 심
사위원들은 기존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에
서는 활용이 제한됐던 전도성 고분자 바인더

를 전고체 배터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SK온은 신소재 바인더를 적용한 실
리콘 음극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에 가
까운 압력 조건에서 구동하는데 성공했
다. 실험실 수준의 소형 셀을 넘어 실제
전기차 적용을 가정한 고에너지밀도 파
우치형 배터리로 성능을 검증했으며 수
백 회에 걸친 충·방전 시험 이후에도 초

기 용량과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음극은 이론적으로 흑연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저장 용량을 지닌 차
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힌다. 그러
나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300% 이상
팽창·수축하면서 입자 간 접촉이 끊기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문제가 상용화
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극 입자 간
접촉을 통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구조
로, 접촉이 끊길 경우 성능 회복이 쉽지
않다. 기존에는 바인더 사용량을 늘리
거나 높은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활용됐
지만 널리 사용된 폴리비닐리덴플로라
이드(PVDF) 바인더는 절연성이 강해
사용량이 늘수록 전극 성능 저하라는 한
계를 안고 있었다.

SK온과 연세대 연구진은 저압 환경
에서 나타나는 성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리튬이온 전달이 아니라 전극 내부 전자
이동에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발한 PPMA는 전극 전반
에 연속적인 전자 이동 통로를 형성하는
동시에 실리콘 입자 간 결합력을 강화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정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
다. 기존 방식은 특수 용매와 고압 공정
이 필요했으나, PPMA는 물 기반 공정
이 가능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생산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적용 압력도 기존
대비 80% 이상 낮췄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사진)은
“산학 협력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었다”
며 “앞으로 학계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
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공정위, 구스·덕다운
허위광고 17개社 적발

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우양통상 등 14곳 경고 처분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
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
재 솜털 등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
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제
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거
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
시·광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월
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나
머지 14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
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
이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
인 의류 판매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
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
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시가 가
능하다.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은 구스
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
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
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 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
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
에 미달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회장 구속’ 면한 MBK파트너스, 이번엔 금감원 중징계 칼날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제재안 조율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
의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금융 상환을 위해 RCPS 계약 조건을 변
경하는 과정에서 펀드 출자자(LP)인 국
민연금 등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MBK가 자사의 이익을 방어
하기 위해 LP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
으로 계약을 변경,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상
태다. 만약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가 확

정될 경우 MBK는 신규 펀드 조성이나
위탁 운용사 선정 등 정상적인 경영 활
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내 1위 사
모펀드로서의 평판에 회복하기 힘든 타
격이 될 전망이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어권 보
장 필요성을 들어 김병주 회장 등 경영
진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
보강 수사와 재판 공방 등 사법 리스크
는 장기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
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3000억원
의 긴급 자금 수혈과 적자 점포 폐점 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MBK
파트너스 업종 제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

/손종욱 기자

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자금줄이 마른
홈플러스는 14일 화성동탄점 등 7개 점
포의 추가 영업 중단을 결정했고 1월 직
원 급여 지급마저 불투명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